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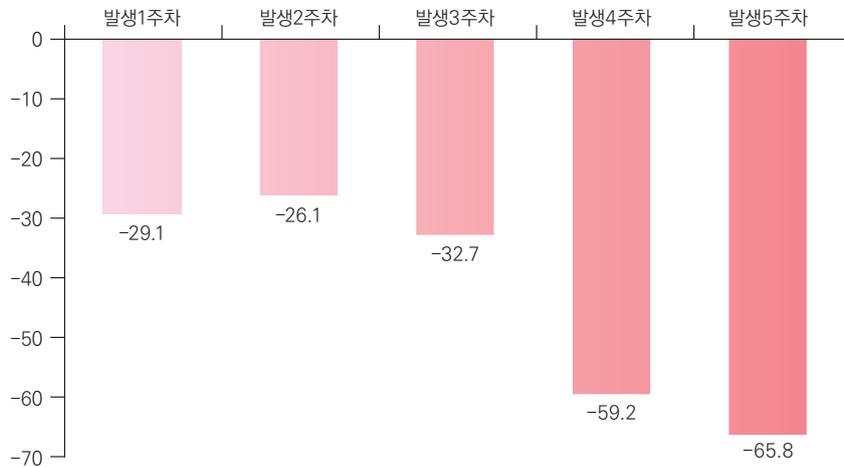
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조기 종식되기를 바라며, 특집호를 통해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한시적으로 수시 발간하고자 합니다.

코로나19 극복, 이제는 지역경제활성화다

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얼어붙은 민간소비

- “최근경제동향”의 통계에 따르면,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민간소비가 빠른 속도로 둔화
 - 올해 1월 국내 민간소비는 승용차 판매, 백화점 매출, 대형마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리 수 감소세를 보이며, 온라인 쇼핑 부분만 소폭 상승
- 2002년 사스(SARS), 2015년 메르스(MERS) 등의 감염병 유행과는 달리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우 단기간 경기회복(V자 반등)이 쉽지 않음
-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주차별 외식업체 고객수 변동을 보면 발생 5주차에 평균 65.8%의 고객수 감소를 나타냄

■ <그림 1>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외식업체 고객수 변동률



자료 : 한국외식산업연구원

- 권역별로는 확진자가 가장 많은 경상권 -74%, 충청권 72%, 강원도 -71%로 고객수 감소폭이 컸고, 서울 등 수도권도 60%가 넘는 감소세를 보임

내수·수출의 동반 침체로 인한 복합불황의 늪

- 세계 GDP와 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경제대국들 모두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
 - 이에 따라 주요기관들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%대에서 1%대로 일제히 하향 조정
 - 세계경제의 1%대 성장은 국제통화기금(IMF)이 경기침체 기준으로 제시한 성장률 2.5%에 못 미치는 수치임

【 표 1】 주요 경제대국의 코로나19 감염현황

(2020. 3. 30 기준, 단위: 백분율,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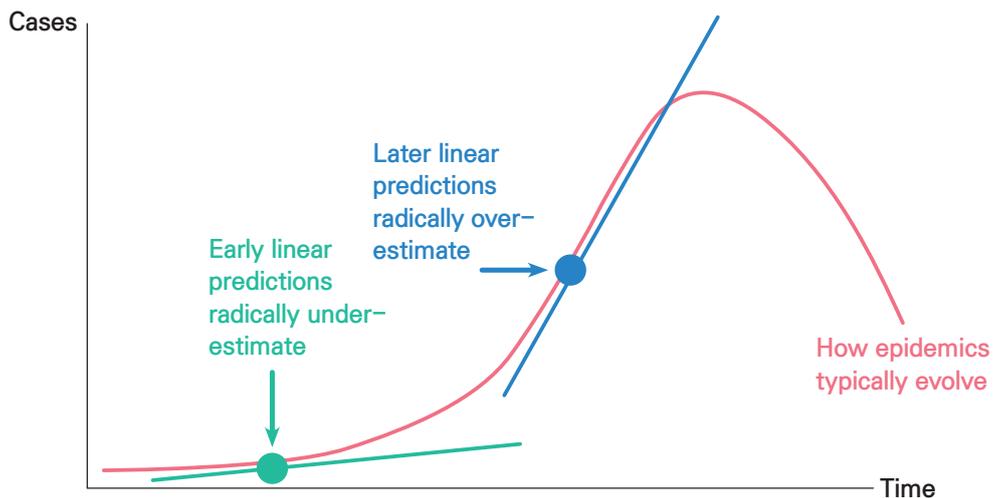
순위	국가	부문별 비중			코로나19 확진자 수	코로나19 사망자 수
		GDP	제조업	수출		
1	미국	24%	16%	8%	142,735	2,488
2	중국	16%	29%	13%	81,470	3,304
3	일본	6%	8%	4%	1,866	54
4	독일	5%	6%	8%	62,435	541
5	영국	3%	2%	2%	19,522	1,228
6	프랑스	3%	2%	3%	40,174	2,606
7	인도	3%	3%	2%	1,071	29
8	이탈리아	2%	2%	3%	97,689	10,779
9	브라질	2%	1%	1%	4,256	136
10	캐나다	2%	0%	2%	6,320	65

자료 : 세계은행, FT Covid dashboard

주 : GDP규모 주요 10대 경제국들의 세계시장 대비 GDP, 제조업, 수출 비중을 나타냄. 코로나19 확진자 수, 사망자수 통계는 2020.3.30. 기준

- <그림 2>의 붉은 선은 감염병이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나타냄
 - 최초 발생이후 초기 확진자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나, 중기에 접어들면 확진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. 변곡점을 지나면서 말기에 감소하는 패턴을 보임
 - 감염병 확산의 이러한 패턴 때문에 확산 초기에는 심각성을 과소 예측하다가, 반대로 중기에는 빠른 확산세가 지속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게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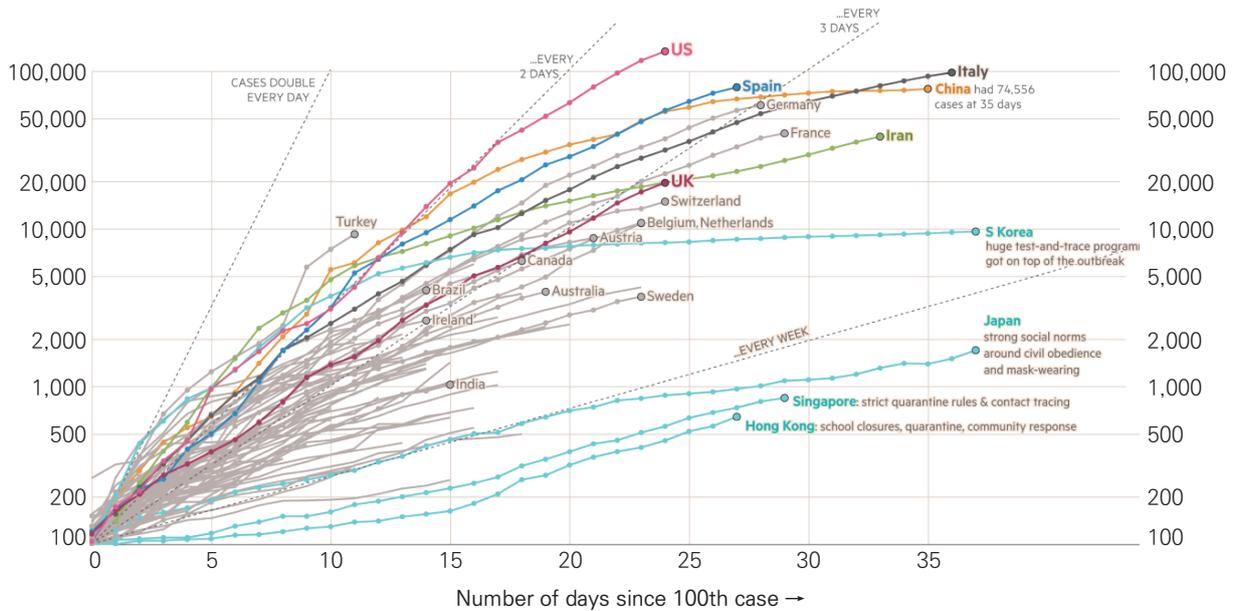
【 그림 2】 시간에 따른 감염병의 진행과정



출처 : CERP, 「Economics in the time of Covid-19」

- <그림 3>은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경과궤적을 나타냄
 - 영국, 스페인, 이탈리아 유럽과 미국의 경우 코로나19가 현재 진행중이나 한국의 경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정부의 확산방지 노력이 성과를 보이며 증가세가 한풀 꺾임
 - 이제는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
-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해 짐에 따라, 이제는 감염병에 대한 불안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침체 극복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시점

■ <그림 3> 주요국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경과 궤적 ■



자료 : FT analysis of Johns Hopkins Univ., CSSE:Worldometers

주 : 100명의 확진자 발생을 기점으로 경과일별 각국의 확진자수 궤적을 나타냄. 2020.3.30. 기준

-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부진 장기화와 L자형 복합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,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필요함
 - 내수경기 침체에 더해 세계 성장을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로 국내 경제는 심각한 복합 불황의 늪에 빠질 우려가 높음
 - 이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사라지더라도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L자형 불황이 계속될 수 있음

금리 인하만으로는 역부족, 재정적 적극적 역할이 필요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'제로금리' 시대 재개막
 -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)는 3월 4일 기준금리를 0.5% 포인트 인하한데 이어, 다시 15일 한꺼번에 1% 포인트 인하를 단행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'제로금리' 시대를 열었음
 -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흐름에 맞추어 기준금리 빅 컷(0.5% 포인트 이상 인하)을 3월 16일 단행함
- 그러나 한계에 부딪힌 통화정책에 더해 수요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
 - 소비와 왕래가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혼란에 빠진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역부족
 - 위기상황에 걸맞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급하며, 정부와 지자체 재정지출이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함
- 미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제공이 발표가 되어 1인당 1,000달러(약 123만원)의 지급을 결정
 - 당초 근로자 소득세 감소를 저울질 하던 미국의 경우, 소득세 감소 혜택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실업계층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한시적인 기본소득 제공으로 선회하여, 도입을 고심하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제시
 - 일본에서도 1인당 최소 14만원의 현금지급 방안을 논의 중

▣ <표 2> 주요국의 코로나19 정책대응 사례 ▣

분야	사 례
 <p>공공의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강 관리 종사자에 대한 보너스 지급(싱가포르) • 정치 지도자들의 1개월 급여 기부(싱가포르) • 모든 가정에 소량의 안면 마스크를 제공하고, 건강한 사람의 경우 착용을 권장하지 않음(싱가포르)
 <p>재정정책 : 가계부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화 \$1,000 이상 18세 이상인 모든 시민에게 현금 지급(홍콩) • 피해지역의 전기요금 부담 일시 유예(이탈리아) • 무보험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 • 성인 1일당 \$1,200 재난소득 현금 지급(미국) • 가계 담보대출 상환 3개월 유예, 외식업, 영화관에 대한 사업소득세 1년 면제(영국)
 <p>재정정책 : 기업부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유지에 대한 단기 보조금 지급(독일) • 5인 미만 소기업 3개월간 최대 9,000유로 지원(독일) • 관광, 숙박, 항공업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(싱가포르) • 기업의 자산가치 감가상각 허용(독일) •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 2배 확대(독일 KfW) • 근로자 재택근무, 유급휴가로 인한 기업 부담에 대한 광범위한 재정지원(싱가포르) • 중소기업 사업소득세 감면 및 저이자 대출 제공(홍콩) • 경영난에 처한 대기업 재정투입/지분인수(프랑스) • 2,000억 유로 규모의 긴급대출, 신용보증, 직접적인 재정지원(스페인)
 <p>G20/EU의 경기부양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긴급 세금 감면, 사회 보장 보험의 한시적 납부 유예 • EU 내 재정위기 국가들에 대한 건전성 기준 완화(EU) • 2조2000억 달러(2,684조원)¹⁾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발효(미국) • 1조 유로(1,344조원) 규모의 부양책(독일) • 628조원 규모의 긴급경제대책(일본) • 54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(싱가포르)
 <p>G20의 확장적 통화정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준금리 인하(Fed, Bank of Canada 등) •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(MBS)을 필요한 만큼 매입하는 무제한 양적 완화(Fed) •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전제로 한 은행 유동성 제공(ECB, TLTROs) •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
 <p>국제기구 긴급 자금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IMF의 5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대출(IMF) • 바이러스에 피해를 받는 위기국 민간 부문에 대한 IFC/EBRD 기금 자금지원(세계 은행) • 전염병 관련 재난을 포함하도록 EU 연대 기금을 확대(EU)

자료 : CERP, 「Economics in the time of Covid-19」

위기상황에 맞춰 틀을 깨는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

- **(소상공인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)**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, 실제 집행률은 1/4이 안 될 정도로 미진함
 - 중기부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 2월 13일부터 한달 간 정책자금 집행률은 23.2%에 그침
 - 일차적으로 소상공인들 정책자금 신청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문턱을 낮춰, 추경 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·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에 속도를 높이고, 매출 제로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자금지원금 지급도 필요함
 -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지역을 선포하고, 이들 지역의 음식점, 관광업,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에게 대한 긴급 생존자금, 중소기업인 회생을 위한 금융이자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함
- **(재난기본소득 지급)**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시행을 주저하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측면에서 투자로 인식전환
 -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경남도, 서울시, 경기도 등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, 전주시를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80프로 이하에 해당하는 주민들에 한해 1인당 52만원의 재난기본 소득 지급을 시작
 - 현금지급에 따른 재정부담과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높으나, 위기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저소득층,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금성 복지를 지출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안전망 제공이라는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
- **(지자체의 비대면 소비 플랫폼 제공)**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(untact economy)가 도래하면서,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지자체가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
 -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소비위축은 소비자들이 모임 및 외출 등의 외부활동을 극도로 꺼리는 데서 기인한다는 특징
 - 음식점 등의 경우 소비자들이 매장 내에서 식사를 하는 대신 포장 주문을 받는 방식의 대응을 모색할 수 있음
 - 또한 지자체가 개발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망 등과 연계하여, 지자체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배달 주문을 하고 이에 대한 배달료 등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음
- **(지역사랑상품권 확대)**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행규모 확대를 추진
 - 작년 한해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2.3조원 규모이며,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생산유발,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올해 발행액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음
 -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액 대비 3%에서 많게는 10%까지의 할인율을 적용받으며,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액과 가치 체감형 화폐²⁾라는 특징으로 법정화폐보다 빠르게 소비, 유통하는 특징이 확인되며, 이에 따라 현금살포 형태의 보조금 지급 보다는 소비 촉진에 보다 효과적임
- **(재난관리기금의 활용)**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·대응·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
 - 3월 31일 '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'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
 -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 원의 사용 용도를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·소상공인 지원에 투입이 가능함

1) 명목GDP 규모 대비 미국 11%, 독일 30% 일본 10%, 싱가포르 약11%이며, 우리의 경기부양책의 경우 약 132조원으로 GDP의 7% 수준임, 자료: 美 2600조, 獨 1300조, 日 600조 폰다...한국보다 최대 20배, 중앙일보, 2020.03.29

2) time depreciation currency

▶ 내용문의 : 여효성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부연구위원, 033-769-9877, hsyseo@krila.re.kr)

지난호 보기 :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재난 대응의 진단 및 과제(박재희 부연구위원)

원문보기 ▶

✉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@krila.re.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